

# 대구지역 새터민 정착현황 및 문제점

허 영 철\*

## I. 서론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른 체제의 위기를 겪게 됨과 동시에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사정의 악화,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수의 국민들이 굶주림에 노출되었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3년간은 북한 내에서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시기로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함경도 등의 변방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경주변의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월경을 대규모로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몽골이나 동남아의 제3국을 통해서, 때로는 중국주재 외국대사관을 통해서 남한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분단 이후, 귀순용사라는 이름으로 남한으로 넘어와 체제선전의 수단이 되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앞에서 서술한 과정을 거치며 1996년 입국자가 56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9년부터는 연간 1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7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들에 대한 공식명칭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명명하게 된다. 2006년에는 한 해 동안 입국인원이 1900여명에 달하였으며, 2007년 2월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 1만 명 시대에 돌입하였다<sup>2)</sup>.

1만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분단의 세월만큼 남한사회정착에 힘들어 하고 있다. 사회제도, 문화, 언어, 가치관 등의 남북사회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 큰 장애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취업문제를 비롯하여 가정과 여성문제, 청소년 부분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부적응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는 보다 높은 임금과 취업을 위해 배정받은 지방의 아파트를 비워둔 채 수도권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사무국장

1)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5-06, (2005).

2)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동포사랑” 제18호, (2007).

## II. 새터민 정착지원 현황 및 문제점

### 1. 새터민의 개념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는 시대와 호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자유북한인’, ‘경제유민’, ‘북한이주민’ 등 용어사용에 일관성이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용어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005년 통일부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던 용어인 ‘탈북자’와 공식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의 ‘탈’자가 의미하는 ‘탈출, 도주’와 같은 부정적 의미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공모를 통해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2. 새터민의 현황

<표-1>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현황을 최근까지 정리한 자료이다. 분단이후 1989년까지 607명에 불과하던 숫자가 94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2월에 총 입국인원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실제 거주인원은 2006년 12월까지의 사망자와 외국이민자 325명을 제외하고 9,767명이다. 또한, 2000년 이후 입국한 인원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88.7%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2007년 2월 현재)

구분	'89 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2	합계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1578	827	10,092

출처: (재)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7)

또한, 입국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입국에 있어서의 큰 특징은 여성 입국자와 가족단위 입국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여성의 입국비율은 1995년 전까지 7.6%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부터 남성의 입국비율을 추월하기 시작하여 2006년 입국자의 경우에는 74.7%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가족단위 입국의 증가와 여성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은신 및 체류하는데 남성보다 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족단위 입국의 경우도 2000년 50가족에서 2002년 147가족으로 늘어났고 2004년에는 305가족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정부와 민간의 지원활동에서도 여성이나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여성,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노동자, 농장원등 생산근로 계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표-2>를 살펴보면 2006년 입국자의 재북 직업 비율은 최근 여성과 가족단위 입국자의 증가로 인해 학생, 주부, 노인 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2> 2006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재북시 직업비율

직업	관리직	전문직	노동자 농장원	봉사분야 (이용사, 접대원)	무직,부양 (학생,주부, 노인)	예술 체육	군인
비율	1.7%	1.6%	36%	3.6%	56.3%	0.4%	0.4%

출처: 통일부 (2007)

국내 지역별 분포현황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이 각각 37%와 27.7%로 수도권 지역에 64.7%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다른 광역시 지역에 18.6%가 거주하고 있으며, 도 단위 시군에 나머지 이탈주민들이 배정받아 거주하고 있다.

### 3. 새터민 정착지원 현황

1997년 이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들에 대해 정착지원금,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등을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거주지역에서의 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적인 체계로써 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제도를 두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sup>3)</sup>.

[입국지원]

북한이탈주민 발생(해외·국내) 동남아, 몽골, 러시아, 중국, 조선족으로 입국
° 재외공관 및 관련기관(국정원)에 보호신청



조사(정부합동-대성공사) 평균1개월
° 정부합동 조사 * 조사종료 후 관련기관에서 통일부로 이관

[시설보호]



보호결정(통일부)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여부를 결정 (중국거주10년이상의 경우 미인정)



사회적응교육(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 각종 사회 적응교육 실시(10주)

[지역사회지원]



사회편입(통일부·노동부·지자체·경찰청)
° 정착지원금, 취업장려금, 임대아파트 지원 ° 거주지 보호, 신분보호, 취업보호

<그림-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흐름도

3)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지역 북한이주민 정착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2004).

민간단체들의 경우 1997년 10여개에 불과하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단체들이 2006년 말 현재 60여개의 단체가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연대에 가입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 지역에 55개 단체가 집중되어 있다<sup>4)</sup>.

기본적인 정부의 지원체계는 2004년 말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수가 6,000명을 넘어서면서 ‘보호’가 중심이었던 기존의 정책에서 ‘자활 기반마련 강화’로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가 전담하다시피 해 온 정착지원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나누어 맡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실시하였다. 2005년부터 실시된 통일부의 제도개선방안의 핵심은 첫째, 정착지원금을 축소하고 취업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과 둘째, 정착도우미제도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 민간단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정착도우미제도는 전국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기존의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를 넘겨받아 북한이탈주민 1세대 당 2인의 자원봉사 정착도우미를 통해 1년의 기간 동안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다.

#### 1). 새터민 정착지원 체계

2001년 이후, 대규모 입국에 따른 정부지원제도의 기본 방향은 취업을 유도하고 현금의 지급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 왔다. 2005년 ‘정착도우미’ 제도의 도입과 취업 인센티브제의 도입은 큰 전환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또한, 2007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의 보장기간을 6개월로 축소시킴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축소되어 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제도의 변화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행정을 맡고 있는 일선 동사무소에 북한이탈주민들의 항의가 많아지고 있다.

#### 가. 정착금 지원 (2007년 기준)

4) 북한이주민지원센터, “광주전남 북한이주민지원센터 개소기념세미나”, (2006).

&lt;표-3&gt; 정착기본금

가족수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
1인	300	300(700)	1,300(1,000)	1,900(2,000)
2인	400	700(1,000)	1,700(1,500)	2,800(2,900)
3인	500	1,000(1,300)	1,700(1,500)	3,200(3,300)
4인	600	1,300(1,600)	1,700(1,500)	3,600(3,700)
5인	700	1,600(1,900)	2,000(1,500)	4,300(4,100)
6인	800(700)	1,900(2,200)	2,000(1,500)	4,700(4,400)
7인 이상	900(700)	2,200(2,500)	2,000(1,500)	5,100(4,700)

출처: 통일부(2007)

&lt;표-4&gt; 정착장려금

구분	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5개월이하	-	미지급
	6개월~12개월	개월×20	
	1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직종	200	추가
자격취득 장려금	1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직종	200	
취업 장려금	<u>1년차</u>	<u>450</u>	(종전) 200
	<u>2년차</u>	<u>500</u>	(종전) 300
	<u>3년차</u>	<u>550</u>	(종전) 400
총액(최고액) 2,140			

출처: 통일부(2007)

&lt;표-5&gt; 정착가산금

구분	지급기준	지급수준(단위:만원)
연령 가산금	만 60세이상	
장애 가산금	장애등급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병으로 3월 이상 입원	개 월×80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	편부모 아동	360(세대당)

출처: 통일부(2007)

2007년 변경된 제도에 의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착금이 3백만원이 줄어들고 취업장려금과 자격취득 장려금을 확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지나, 장려금이 1곳의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이 적성이 맞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점과 사업주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으로 인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나. 초기 시설보호 지원

정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교육을 위해 하나원(공식명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을 통일부 산하에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증축 공사를 진행했으며, 성남시에 분원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도 시흥시에 분원을 개소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흥분원에는 남성 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있으며, 안성 본원에는 여성들과 가족단위 입국자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차례 교육기간의 변화를 겪었으며, 현재는 10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탈북 및 제3국에서의 불안한 생활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과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과 남북한 언어차이에 따른 국어교육, 현장체험 교육과 취업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돌려 전문적인 민간교육단체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경우 하나원 인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 빠른 적응을 돕고 있으며, 청소년 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하나돌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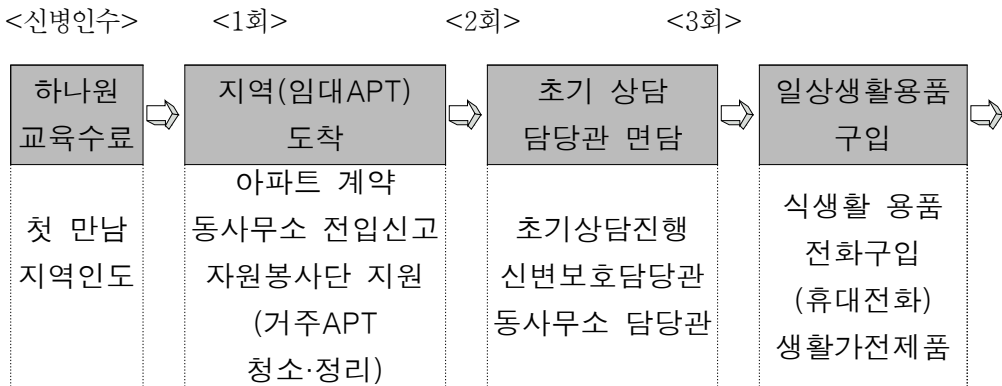
<표-6 하나원 주요 시설 현황>

시설명	규모	시 설 내 역
본관	약 1,235평	· 행정지원실, 회의실, 종교활동실, 강당, 건강관리실, 「하나둘학교, 식당 등
교육관	약 704평	· 강의실, 분임토의실, 자치활동실, 자원봉사실 자료실, 등 교육생의 사회적응교육 공간
제1생활관	약 701평	· 1인실, 2인실, 4인실, 가족실 등 교육생 생활공간
제2생활관	약 541평	· 4인실 생활공간(여성·아동 전용공간)
분원	약 1,026평	· 강의실, 실습실, 숙소 등(3인용 38실)

출처: 이화정 (2004)<sup>5)</sup>

#### 다. 사회편입 후 정착지원- 정착도우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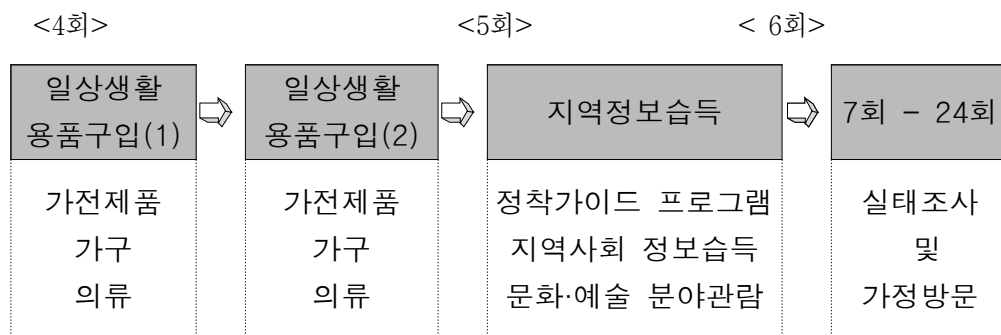
기존 신변보호담당관<sup>6)</sup>들이 담당하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지원 시스템이 입국숫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경찰업무의 과중함과 이탈주민들의 정서적 지원에 경찰의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통일부는 2005년부터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1년간 초기정착을 지원하는 정착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착도우미 제도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 7개 단체이며, 이 중 전국 사·군·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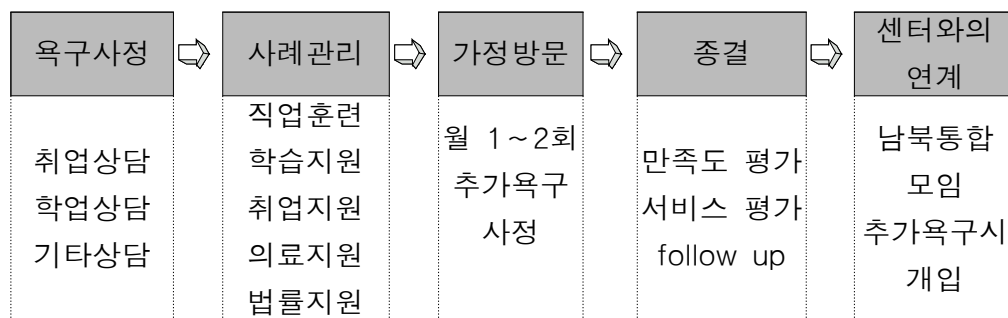
5) 이화정, “북한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03).

6) 주로 경찰서의 보안과 형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실태조사 및 가정방문>



출처: 북한이주민지원센터(2005)

<그림-2, 정착도우미 흐름도>

위에 지사조직을 갖추고 있는 적십자사가 78%정도의 신규 배정 이탈주민들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기관들은 서울, 부산, 대구지역의 일부를 맡고 있는데 서울지역은 공릉, 한빛, 방화6, 가양7, 태화 종합사회복지관이 각각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강남구를 담당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물론대 종합사회복지관과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이 맡고 있다. 대구지역은 달서구와 수성구 신규 전입자는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동구, 북구 지역 신규 전입자는 적십자사 대구지사가 정착도우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2>는 정착도우미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 대구광역시와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정착지원 흐름도이며, 현재 대부분의 지역은 이 흐름도와 유사한 형태로 정착도우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Ⅲ. 대구지역 새터민 정착지원 현황

#### 1. 대구 지역의 정착현황

<표-7> 대구지역 구별 정착 현황(2006년 12월 현재)

	달서구	북구	동구	수성구	기타	총계
인원	158	36	44	92	4	333
%	47.3	10.8	13.2	27.5	1.2	100

출처: 북한이주민지원센터 (2007)

<표-7>은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현황인데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지 배정을 받고 있으며, 달서구 지역 (상인동 비둘기, 월성주공, 성서주공)에 가장 많은 158명이 살고 있다. 수성구는 황금주공, 지산5단지, 범물 용지아파트에 9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북구는 산격주공에 36명, 동구는 안심주공과 강남주공에 44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 기타지역은 중구와 서구에 4명이 살고 있다.

대구지역의 정착도우미 제도는 2곳의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데, 달서구와 수성구 지역의 신규전입자는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동구와 북구의 신규전입자는 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 정착도우미를 배치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표-8>은 대구지역 지원단체들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대구지역의 경우는 2005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었다. 조례에 의거하여 기존의 지역협의회를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로 개칭하고 위원장을 자치행정과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격상하여 년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협의회 산하에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1회 이상씩 북한이탈주민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표-8>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 현황

구분	공공기관	민간단체	정착도우미
거주지보호	대구광역시, (자치협력과) 각구, 군청, 동사무소		북한이주민 지원센터 (수성구, 달서구)
신변보호	시경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취업	노동청(고용지원센터)		
법률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단(변협)	
여성, 가족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여성회, YWCA	적십자사 대구지사 (동구, 북구)
청소년, 교육	교육청	KYC,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종교		기독교 천주교(민족화해 후원회)	
사회복지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학산, 대구종합복지관 북한이주민지원센터	
기타	의회, 민주평통(수성구, 달서구)		

출처: 북한이주민지원센터(2006)

## 2. 대구지역 새터민 실태조사 결과<sup>7)</sup>

### 1) 탈북이유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이유로는 57.5%(42명)가 식량난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응답했으며,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가 17.8%(13명), 먼저 탈북한 사람의 인도로가 8.2%(6명) 등으로 나타났다.

구분	인원	빈도
탈북이유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13
	출신성분이 안 좋아서 (북한에서 성공하기 어려워서)	3
	식량난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42
	먼저 탈북한 사람의 인도로	6
	기타	9
계	73	100

7)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지역 북한이주민 정착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2004).

## 2) 중국체류기간

탈북 후 한국으로의 입국사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을 살펴보면 5년이하가 39.5%(32명), 6년이상 24.7%(20명)으로 나타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당기간동안 중국에서 체류했던 것을 알수 있다.

구분		인원	빈도
중국 체류기간	1년이하	15	18.5
	3년이하	14	17.3
	5년이하	32	39.5
	6년이상	20	24.7
계		81	100

## 3) 입국이유

남한으로 입국한 가장 큰 이유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가 46.6%(34명), 신변불안이 41.1%(3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분		인원	빈도
입국이유	신변불안	30	41.1
	먼저 남한에 입국한 사람의 인도로	4	5.5
	보다 나은 삶을 위해	34	46.6
	기타	5	6.8
계		73	100

## 4) 브로커비용

입국시 브로커 비용은 100만원 이하가 12명(16.2%), 300만원 이하 14명(18.9%), 600만원이하 26명(35.1%), 900만원 이하 7명(9.5%), 1,200만원 이하 11명(14.9%), 그 이상이 4명(5.4%)으로 나타났다. 이들 입국비용은 최대 1,400만원이고, 평균 509만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인원	빈도
브로커비용	100만원 이하	12	16.2
	300만원 이하	14	18.9
	600만원 이하	26	35.1
	900만원 이하	7	9.5
	1,200만원 이하	11	14.9
	1,200만원 초과	4	5.4
계		74	100

## 5) 남한거주형태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혼자 살고 있다가 41.5%(34명)로 가장 많았고, 북에서 온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가 30.5%(25명)였으며, 북한이 주민끼리 같이 산다가 15.9%(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인원	빈도
남한거주형태	북에서 온 가족과 함께	25	30.5
	남한에서 결혼가족과 함께	5	6.1
	혼자	34	41.5
	북한이주민끼리	13	15.9
	기타	5	6.1
계		26	100

## 6) 월소득

가구별 월소득수준을 보면, 혼자사는 가족의 경우 60만원이하가 58.8%, 100만원 이하가 29.4%이었으며, 2명이 사는 가족의 경우 42.9%가 100만원 이하이며, 21.4%는 2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3명이상 가족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가 37.5%, 120만원 이하, 200만원이하가 각각 18.8%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30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2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계	
		인원	빈도	인원	빈도	인원	빈도	인원	빈도	인원	빈도	인원	빈도	인원	빈도
가 구 수	1명	1	2.0	30	58.8	15	29.4	1	2.0	4	7.8	-	-	51	100
	2명	-	-	2	14.3	6	42.9	-	-	3	21.4	3	21.4	14	100
	3명이상	-	-	2	12.5	6	37.5	3	18.8	3	18.8	2	12.5	16	100

## 7) 지출비중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주거비(관리비 포함)가 1순위를 차지했고, 식비, 문화생활비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우선순위	빈도
지출비중 (중복응답)	식비	2	68.9
	교육비	5	21.3
	주거비(관리비 포함)	1	85.2
	의료비	7	11.5
	저축	4	41.0
	문화생활비	3	54.1
	휴대폰비	6	13.1
기타		8	4.9
계		-	300

## 8) 언어생활

언어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보면, 매우 어렵다가 10.8%(8명), 조금 어렵다가 63.5%(47명), 평균 2.36으로 나타나 언어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언어 생활의 어려움	매우 어렵다	8	10.8
	조금 어렵다	47	63.5
	그저 그렇다	5	6.8
	별로 어렵지 않다	12	16.2
	전혀 어렵지 않다	2	2.7
계		74	100

## 9) 가장 필요한 것

현재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응답이 33.8%(24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 등 교육을 받는 것이 22.5%(16명), 좋은 인간관계가 18.3%(13명) 등으로 나타났다.

삶의 욕구	마음의 안정	11	15.5
	지식 등 교육을 받는 것	16	22.5
	돈을 버는 것	24	33.8
	여가 선용	1	1.4
	좋은 인간관계	13	18.3
	승진 또는 취직	4	5.6
	기타	2	2.8
계		71	100

## 10) 남한주민태도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39.2%(29명), 조금 냉담하다가 27.0%(20명), 조금 호의적이다가 25.7%(19명), 평균 3.09를 나타내고 있었다.

구분		인원	빈도
북한이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인식	매우 호의적	5	6.8
	조금 호의적	19	25.7
	그저 그렇다	29	39.2
	조금 냉담	20	27.0
	아주 냉담	1	1.4
계		74	100

## 11) 자기인식

지금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51.2%(42명)로 가장 많았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32.9%(27명), 조선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9.8%(8명)로 나타났다.

구분		인원	빈도
자기인지	북한이탈주민	27	32.9
	한국사람	42	51.2
	조선사람	8	9.8
	잘 모르겠다	5	6.1
	기타	-	-
계		82	100

#### 12) 북경력도움

북한에서의 경력이 도움이 되는가의 질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6.6%(30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2.9%(27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17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인원	빈도
북경력도움	매우 도움된다	5	6.1
	조금 도움된다	6	7.3
	그저 그렇다	14	17.1
	별로 도움 안된다	30	36.6
	전혀 도움 안된다	27	32.9
계		82	100

#### 13) 직장생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취업중인 사람이 23.5%(19명)이었으며, 이전에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44.4%(36명), 취업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32.1%(26명)였다. 그러나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정규직은 단 1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취업 경험	취업중	19	23.5	1	5.3	9	47.4	9	47.4
	취업경험자	36	44.4	-	-	17	47.2	19	52.8
	취업경험없다	26	32.1	-	-	-	-	-	-
	계	81	100	-	-	-	-	-	-

또 취업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 취업을 한 횟수로는 3번 이상 한 사람이 44.4%(16명)로 가장 많았고, 그들의 직장경력은 절반이상(55.6%)이 3개월 이하로 나타났으며, 6개월 이하가 27.8%(10명), 1년 이하가 16.7%(6명)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짧은 직장경력을 가지며, 이직률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인원	비율	구분		인원	비율
취업 경험자	취업 경험 횟수	1번	11	30.6	최근 직장경력	3개월 이하	20	55.6
		2번	9	25.0		6개월 이하	10	27.8
		3번 이상	16	44.4		1년 이하	6	16.7
	계		36	100	계		36	100

#### 14) 여가생활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 친구만남, 운동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인원	빈도
여가활동 (복수 응답)	TV시청	30	71.4
	독서	5	11.9
	영화	3	7.1
	여행	5	11.9
	쇼핑	7	16.7
	친구만남	17	40.5
	운동	9	21.4
	기타	8	19.0
계		84	200

#### IV. 논의 및 문제점

이러한 제도의 개선과 민간참여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에 조사결과는 이들이 실제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착지역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적응상의 문제점들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본인이 경험한 굶주림과 굶주림으로 인한 가족의 죽음)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남한으로 입국 후 발병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겪었던 경험과 더불어 중국에서 공안들의 단속을 피해야 하는 긴장된 삶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받는 극도의 스트레스,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치료의 권리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생활하다가 입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찾아오는 우리사회가 풍요로운 사회임은 분명하지만, 극심한 빈부격차가 존재하며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아무런 보호망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지 못한 채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남한사회는 큰 장벽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단순한 이주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차이에 따른 자본주의 부적응,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해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과 남한에서의 사회문화적 충격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복합적인 문제해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관한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남한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 사회통합의 실험 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십년간의 생활공간을 떠난 북한이주민들에게 이념적, 정서적, 생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적응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초기 이주민의 경우 대부분이 정서적 불안정, 소외감, 열등감 등으로 남한사회에서의 부적응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욕구가 한층 높아진다. 또한 이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욕구는 다양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적응에 관한 문제,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 및 진로상담, 남한사회에서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상담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위에서 열거한대로 북한이주민을 위한 지원체계는 매우 다양하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사업을 시작한 시점(2003. 3.)에서 가장 힘든 부

분은 북한이주민이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도적 부분이었다. 모든 사례 마다 흩어져 있는 공공의 지원체계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취업의 경우 담당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북한이주민들의 접근성을 약화시키며 실제적인 취업지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에 있어서 새터민 정착지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차원의 제도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과거 서독정부의 경우 동독이탈주민의 지원에 있어서 주정부가 직접 사회적응교육과 제도지원을 통해 460만명의 동독이탈주민을 서독사회에 정착시켰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모범사례 이지만, 실질적인 예산의 지원이나 제도의 정비는 아직 미비하며, 조례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새터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각 구의 조례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기관간 네트워크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간 네트워크는 이들의 안정적 정착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업무의 중복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은 경제적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적응이 필수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개발이 요청된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개발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이후 대부분 1-3년 정도의 중국체류기간을 가지다 보니, 의료적 부문에서부터 법률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역협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정착지원시스템의 체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